

지각변동 일으키는 신인력정책

신인력정책 여성 비정규직화 보조인력화가속

변형근로, 파견제에 여성·노동계 강력 반발
중소기업 육성은 명분,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불보듯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두고 터져나오고 있는 신인력정책은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변형시간근로제 또한 이를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합법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민노총 준비위는 조만간 '가칭' 파견법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 전하고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계도 파견제 등

로나 파견제 도입이 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정양희(사무직여성부) 실장은 "최근 탄력적 인력활용과 인건비 절감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여성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미 노동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

고 여성의 지위를 더욱 하락시킬 것은 물론 파견여성노동자들에게 법적 모성보호규정은 사문화되고 결혼퇴직이 일반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파견제 논의는 이미 단체협상으로 용역을 없애는데 합의한 사업장에 또다시 갈등의 불씨를 던지는 것이라며 산업현장 안정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도 "그간 노동부는 일선 감독관의 수동성을 방치한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단속은 못하겠고 보호는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고용안정과 취업확대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손정미 기자)

이번 회기 내 통과되면 총선에까지 연계 보호 범위 논의는 고도의 연론플레이

신인력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올들어 시간제노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 보조인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변형근

력 강화를 내걸고 사용자들은 여성들을 전부 파트타임이나 촉탁, 용역 등의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겠다는 공언을 서슴치 않는 현실에서 파견제의 합법화는 성별분업을 강화하

인력정책에 일대 지각변동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금융계 등 자동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킬 인력정책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인력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등은 이미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해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미 법제정을 위한 사전정치작업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진단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노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추진

하고 있는 '신인력정책'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간 정부가 기업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주부 및 고령자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묵인해 온 파견법이 오히려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미흡을 이용해 근로자의 중간착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합법화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시켜 인력시장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심화시켜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노동계는 최근 법제정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했고 남은 것은 절차, 즉 허용범위와 근로자 보호정책, 도급과 파견의 구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고도의 연론플레이'라며 이를 저지할 대응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노총준비위원회 윤우현 씨는 "일반적이고 편법적인 근로조건 계약문제에 반대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 연맹별로 구체적인 항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고 통상위, 민자당, 지역구의원들에 항의팩시보내기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리휴가 때 확인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거부 이유로 결근처리한 병원장 등 검찰 송치

생리여부 확인을 거부한 간호사를 결근처리한 병원장과 수간호사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방노동청은 담당 수간호사 등의 생리여부 검사요구를 거절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한 간호사 고 아무개(28)씨를 결근으로 처리한 대구정신병원장 정 아무개(38)씨와 담당 수간호사 박 아무개(3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임신이나 폐경, 자궁적출 등 생리가 불가능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예외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고 씨처럼 정상적인 생리를 해야 할 여성은 당일의 생리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리유무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 생리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고 씨는 지난 5월 말경 생

리휴가를 신청했다가 수간호사 등이 '전달의 생리휴가일로 미루어 생리기간이 아니다'며 생리확인검사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휴가신청서를 낸 후 휴가를 다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병원측이 결근으로 처리하자 이에 불복해 노동청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대구지방노동청의 해석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공정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